
정책참고자료

2018-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

4

2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 안 돼 -

7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大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선도

-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14

4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 초청, 미래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 역량과 이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

1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생제 내성균,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교통사고 문제해결에 정부부처들이 손잡는다”

- 과기정통부,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 선정 -

23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1. 24.~2. 28.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

29

7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친환경농업 재도약을 위한

33

발전방향 모색

- 농식품부-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 개최(1.24) -

8 환경부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35

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임대료 지원으로 산재노동자
창업부담 완화**

40

- 최고 1.5억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 -

10 여성가족부

**8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체감형 성평등 정책 추진에 속도 낸다.**

44

-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시상식 및 19개 신규·재지정 협약식』 개최 -

11 국토교통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47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50

- 양식분야 기후변화 피해 저감 및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

<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요 >

- 일시: 2018년 1월 24일(수) ~ 26일(금)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후원: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최: 38개 사회과학 학회 공동,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주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는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션이 진행된다.
 - 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과 농촌·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담론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에 참석하였으며,
- 25일 주제별 세션에는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각 소관 분야에 대해 발제를 하고, 각 주제별로 국·과장들이 토론에 참석한다.
- 26일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종합 세션에 참여하여, 9개 분야별 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 및 종합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면서,
- “문제인 정부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 많은 조언들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일정

일 시/구분		행 사 내 용(주제)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14:00 ~ 14:40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 개회사: 조직위원장 ◇ 축사: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00 ~ 16:20	개막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정치학회 - 한국경제학회 - 한국행정학회 - 한국사회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6:40 ~ 18:00	국제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 한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 - 발표 및 토론
18:30 ~ 20:00	환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 환영사: 제주도지사 - 학회 참가자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9:00 ~ 18:00	주제별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분과 (9-Track) ①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②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③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④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⑤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⑥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⑦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⑧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⑨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12:20 ~ 13:30	정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간담회 - 인사말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기조발제: 국회의장 -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학회 참가자 등
16:00 ~ 18:00	특별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세종 특별자치 발전 - 특위위원, 지역발전위원장, 세종시장, 제주지사 등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10:00 ~ 12:30	종합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의 장과 정책제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 - 10:00 ~ 10:50: 주제별 분과 대표 발제 - 11:00 ~ 12:30: 토론: 행안부차관, 지자체 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 안 돼 -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 (99.4%, 3,190건 중 3,172건)

-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들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①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③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

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⑥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

음

⑦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등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大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선도

-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 (5개 국정과제) 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④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 '18년 중기부 소관 예산(8.9조원)의 약 65.5% 수준
 -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2년까지 10조원 조성('18년, 2.6조원),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 (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 우대하여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
-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감면대상 확대 (이자→원리금), 분할상환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 사업화(1억원), R&D(1.5억원), 엔젤매칭펀드(1억원), 사업화 후속지원(0.5억원) 등을 연계 지원

②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 이를 위해,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 추진한다.
-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 (도입 목표) ('18) 1만개 기업 → ('20) 5만개 → ('22) 10만(도입기업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 규제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중세트 도입

** 특별지원지역 제도 : (현행) 낙후 산단만 지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해 지역 등 추가(지정 시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켄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 (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 10시

-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 R&D 자금 1조 1천억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 확대 ('16, 24.2% → '22, 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 AI/빅데이터, 5G, 지능형 센서, 정보보호,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등

-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22년까지 2만개 보급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 '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 ('17, 16,500 → '18, 21,960, 5,460억원 ↑)한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 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금 등에 우선 적용후 확대 추진

**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 (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 해외에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연계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불합리 규제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 (참 고) 519개 중소·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중복 서류제출 △중복 행정조사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1.18(목) 중기부 연두 업무보

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 초청, 미래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 역량과 이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을 1월 24일 16시 건국대 법전원(102호)에서 개최하였다.
- 제2차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대학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HRD정책중점연구소장)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량’을 주제로 발제하고,
 - 이어서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협의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어서 정영근 선문대(사립) 입학처장, 채영희 부경대(국립) 입학본부장, 황현정 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욱 인창고 교감, 김재휘 서울대 학생(자유전공학부),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다.
- 모든 발제들은 포럼 종료 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해 공개되었다.
- 아울러, 교육부는 제2차 포럼 이후 제3차 대입정책포럼(‘18. 2. 8. 예정)에서는 고교, 교육청 및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차후에 대입정책포럼에서 제안된 안을 종합하여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목적)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행주체인 대학의 의견 경청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 추진

※ 제1차 대입정책포럼('17.12.12.)에서는 고교, 학부모·시민단체, 대학 등 교육주체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

※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는 고교 및 교육청의 의견 경청 예정('18.2월초)

- (일시) 2018. 1. 24.(수) 16:00~19:00 (3시간)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2호 (250석 규모)

- (발제) 총 2명

- (발제1)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량 (조대연 고려대 HRD정책중점연구소장)
- (발제2)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김현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경희대)

- (토론자) 정영근 선문대(사립) 입학처장, 채영희 부경대(국립) 입학본부장, 황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욱 인창고 교감, 김재휘 서울대 학생,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00~16:10	10'	• 개회	
16:10~16:40	30'	• 발제1	
16:40~17:10	30'	• 발제2	
17:10~19:00	110'	• 종합토론 (80') • 학부모 등 청중 질의응답 (30')	좌장 : 김경범(서울대)

□ 홍보 : 포럼 이후 온교육(www.moe.go.kr/onedu.do)에 자료 탑재 및 의견 경청

붙임 2	그간의 대입정책포럼 일정 및 향후 계획
-------------	------------------------------

포럼 일정(안)	포럼 주제(안) 및 발제·토론자
제1차 포럼 (17.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교육부에 바란다.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 - 발제 및 토론 :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총 9명
제2차 포럼 (18.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량 및 대입제도 개편방안 - 발제 :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 등 - 토론 : 지방대, 교육청 연구자, 고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제3차 포럼 (2. 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방안 등 - 발제 및 토론 : 고교, 교육청, 학부모 등
제4차 포럼 (2월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및 발제·토론자는 추후 공개

‘항생제 내성균,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교통사고 문제해결에 정부부처들이 손잡는다’

- 과기정통부,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 선정 -

- 정부부처들이 힘을 모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항생제 내성균, 농어업인 소외·우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였다.
 -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람-동물-환경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 ※ 미국 : 항생제 내성균에 연간 2만 3천명 사망, 200억 달러 손실 발생(CDC, '13), 영국 : '50년 전 세계 연간 1,000만명 사망, 100조 달러 손실 예측(AMR리뷰, '14)
 - 노년층과 농어업인이 큰 소외와 우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딥러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15, 통계청) : 군 지역 35.1 > 서울 26.5 > 6대 광역시 26.0명
 -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4,600여 명, 부상자가 35만여 명에 달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도로조명 시스템에 IoT 등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저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9.(금) 제17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하여 '19년부터 추진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 정부부처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공

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 정부부처 및 국민 공모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사전기획과 공동기획 연구를 거쳐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 이번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수요발굴(95건) → 사전기획연구(21건) → 공동기획연구(11건)를 거쳐 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①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5년, 470억원)> 사업은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한다.

- 기존에는 각 영역별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해 왔으나, 사람·동식물·환경의 건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One Health의 관점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어 전파되는 기전을 밝혀내고 치료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 ②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5년, 450억원)> 사업은 농진청(주관),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수행한다.

- 이들 부처들이 협력하여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을 겪는 원인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서비스와 ICT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

- ③ <스마트도로 조명플랫폼 개발 및 실증 (5년, 290억원)> 사업은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참여한다.

- 기존 도로조명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5개 유형의 도로(교차로, 스쿨존, 터널, 횡단보도, 결빙도로)를 중심으로 사고위험을

파악하여 운전자·보행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 선정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 '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조속히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R&D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업하여 동 사업의 발굴·기획·지원·평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별 주요 내용

1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보건복지부 약제내성과 이광준 연구관, 043-719-8241)

□ 개요



- 각 부처가 분산 대응하던 사람-동물-환경 영역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방안을 공통분모에 중심을 두어 통합적으로 연구개발
- (사업기간/소요예산) 총 5년 / 총 470억원

□ 주요 내용

-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절성 평가
-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 진단법 개발
- 사람-동물-환경간 항생제 내성기전 및 특성연구
- 항생제 내성균 예방과 새로운 치료전략 개발

□ 부처별 역할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 병원 및 지역사회 협력연구	· 진단법개발 및 제어기술 연구	· 가축(도체) 및 반려동물 분야	· 하천, 폐수 및 인근환경	· 수산 분야	· 축수산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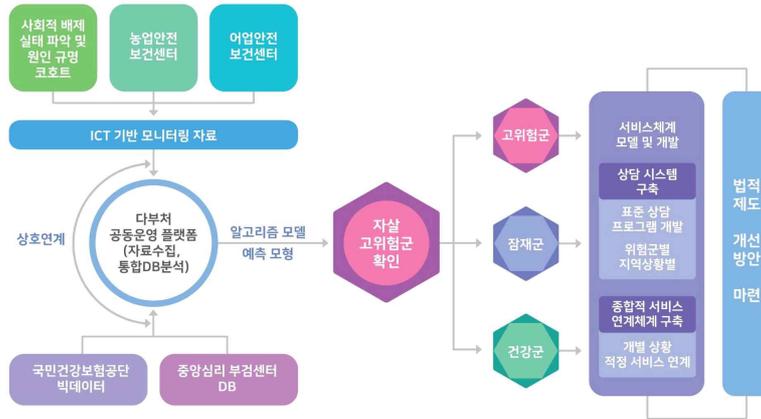
□ 기대 효과

- 인체/비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어를 통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

2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 063-238-4171)

□ 개요



-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의 위험요인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하고 효과적 개입을 위한 모델·기술을 개발
- (사업기간/소요예산) 총 5년 / 총 450억원

□ 주요 내용

-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우울·자살 등 사회적 배제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위험관리 요소기술 개발, 현장적용 실증
- 스마트기술·딥러닝 등을 통한 개입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안전보건 지원 확대, 법적·제도적 문제점 개선

□ 부처별 역할

농진청(주관)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호트구축 · 예방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 기존 프로그램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농어업인 자살 사망자 특성 분석 · 자살영향 위험인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안전 보건센터 기반 고위험군 추적관찰 및 예방관리

□ 기대 효과

-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극단적 사고 예방으로 사회 안전망 확대 및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예방 구현

3

스마트도로 조명플랫폼 개발 및 실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박선용 사무관, 044-201-3922)

□ 개요



- 기존 도로조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사고다발 도로*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저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
- * 사고다발 5개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결빙도로, 일방통행로
- (사업기간/소요예산) 총 5년 / 총 290억원

□ 주요 내용

- 스마트 도로조명 핵심기술(안전요소기술 및 안전융합 도로조명) 개발
- I2X 통신 및 인공지능 기반 Gateway(중계기) 개발
- 외부기관(지자체/경찰청/민간사업자) 간 연계 플랫폼 개발
- 스마트 도로조명 통합 관리체계 구축·실증·연계, 법제도 개선

□ 부처별 역할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 통합 관리체계 구축·실증 연계 시스템 개발 · 법제도 및 관련 서비스 표준 개선	· I2X 통신 및 AI 기반 통신 중계기 개발	·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개발

□ 기대 효과

- 인재형 대형 교통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로 글로벌 스마트 시장 개척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1. 24.~2. 28.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월 24일(수)부터 2월 28일(수)까지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이번 공모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관광벤처와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공모전은 크게 일반관광벤처 부문과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진행되며, 이중 일반관광벤처 부문은 예비관광벤처사업과 관광벤처사업으로 세분화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라면 예비관광벤처사업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관광벤처사업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해양(호수, 강 등 내수면 포함) 관광시장에 특화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사업자라면 2017년부터 도입된 해양관광벤처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취지에서 일반관광벤처 부문에 참여하는 서울, 경기, 인천 외의 만 39세 이하(1979. 1. 24. 이후 출생자) 참가자는 1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받는다. 해양관광벤처 부문에 참여하는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 또는 해수부 주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연어 프로젝트 수상자는

서류심사 시 가점을 받는다.

지역의 유망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설명회도 2월 5일(월)부터 12일(월)까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선발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관광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예비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3,000만 원(자부담 25% 포함)과 함께 기업별 컨설팅·교육, 관광특화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마케팅비 1,400만 원(자부담 25% 포함)과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해양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수부로부터 2,250만 원(자부담 없음)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양관광 특화교육, 판로개척 지원은 물론,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벤처 아카데미 교육을 (예비)관광벤처기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혁신적 관광기업의 성공사례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올해 8년째를 맞이하는 이 공모전은 그동안 400여 개의 혁신적 관광 기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2017년에 선정된 관광벤처사업의 대표사례로는 ▲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체험을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한복남'(관광벤처기업), ▲ 여행·레저 입장권의 판매·발권 등 정보기술(IT)기반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레저큐'(관광벤처기업), ▲ 유모차 사용자의 무장애관광을 위한 이동경로 추천 및 영유아 편의시설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커넥터스'(예비관광벤처기업) 등이 있다.

해양관광벤처 부문에는 ▲ 토종수초 개발과 무균배양 기술 등을 바탕으로 관상수초 세트와 체험상품을 판매하는 '씨알', ▲ 이용자가 교육을 통해

서핑보드를 직접 제작하는 '와이케이서프' 등이 있다.

문체부와 해수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 소재와 혁신적인 창업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모전 선정 기업들에 관광특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신규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은 공식 누리집(www.tourventure.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2월 28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공고요강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공고문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2018. 1.24(수) - 2.28(수)
www.tourventure.or.kr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지역 설명회 일정

구분	장소	일시
대전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2. 5(월) 14:00 ~ 16: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4호)	2. 6(화) 14:00 ~ 16:00
대구	노보텔 버건디 홀 (8층)	2. 7(수) 14:00 ~ 16:00
부산	부산시립미술관(지하1층)	2. 8(목) 14:00 ~ 16:00
울산	울산광역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	2. 9(금) 14:00 ~ 16:00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강의실 7층)	2. 12(월) 14:00 ~ 16:00

참가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또는 7년 미만 창업자 (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에서 작성
 사업계획서 : 지정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문의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
 ※ 접수기한 : 2월 28일(수) 14:00까지, 우편접수 불가

수상자혜택

- | | |
|---------------|---|
| 일반관광벤처
부 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 내외 사업, 개별 사업화 자금 3,000만원 지원(자부담 25% 필수) ◇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선발된 예비관광벤처 사업중 울산광역시 소재기업은 울산광역시(지자체 예산)에서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홍보마케팅비 추가 지원 예정 |
| 해양관광벤처
부 문 | 관광벤처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내외 사업, 개별 홍보마케팅비 1,400만원 지원(자부담 25%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용자 신청가능 ◇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 집중지원 |
| | 해양관광벤처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내외 사업, 개별 사업화 자금 2,250만원 지원 ◇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해양관광벤처부문)

주관 | 한국관광공사

김영록 장관, 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

- 새해 첫 날, 전남 시 방역 현장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24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단체와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농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환경보전 기능 강화 및 농업인 소득향상 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영록 장관은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단체와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특히,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바, 정부와 합심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 올해가 친환경농업 대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행사 개요

- 목적 :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일시 : 2018. 1. 24.(수) 14:00~15:30
- 장소 : aT센터 5층 회의실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 센터)
- 참석자 : 친환경농업단체장 등 40명 내외
 - * 친환경단체 :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김영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주형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권한대행(박종권) 등 단체장 11명 및 관계자
 - * 농식품부 : 장관, 차관보,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장 등
- 메시지 : ①환경보전, 국민신뢰,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재도약 필요 ②친환경농업단체가 친환경 생산관리를 책임있게 추진 ③최저인급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단

□ 세부 일정

구 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3:10~14:00	50'	○ 이동(서울국회 → aT센터)	
14:00~14:10	10'	○ 참석자 소개 및 장관님 인사말씀	*사회/정책설명 :친환경농업과장
14:10~14:20	10'	○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설명 * 현황, 성과 및 반성, '18년 추진계획 등 설명	
14:20~15:30	70'	○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 *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모색 및 의견수렴, 최저인급 인상 관련 지원 안내	*장관님 주제
15:30~		○ 폐회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 비무장지대(이하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6개 지역은 ▲ 철원-DMZ 철새도래지(철새평화타운) ▲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 ▲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 ▲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 ▲ 제주-저지곶자왈과 오름이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 위치한 철원-DMZ 철새도래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인 두루미의 전 세계 최대 월동지로 유명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습지 생태계로 유명한 월영습지와 인근의 솔티숲을 연계한 곳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지난 2015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 밤하늘협회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반딧불이 서식지로도 유명하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인 황새와 II급인 독수리가 사는 곳이며, 지난해 1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도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특히 올해 1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곤충으로 새로 지정된

은줄팔랑나비가 집단으로 살고 있다.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 위치한 제주-저지곶자왈과 오름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지역에 속한 곳이다.
- 이들 6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습지, 순천만 등 기존 20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시도	기초	생태관광지역	시도	기초	생태관광지역	시도	기초	생태관광지역
12	20	20	충북	괴산	신막이 옛길과 괴산호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부산	사하	낙동강 하구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녕	우포늪
울산	중구	태화강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남해	앵강만
경기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전남	순천	순천만	제주	제주	동백동산습지
강원	양구	DMZ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인제	생태마을(용늪)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	광주	북구	평촌마을(명품마을)			
	강릉	가시연습지와 경포호						

-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신규 지정된 6개 생태관광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주민소득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 2013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는 제도이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인제군 생태마을,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신안 영산도 등 4개 지역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전과 비교하여 방문객과 소득이 평균 112%, 79%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이후 소득액 및 방문객 증가 현황

생태관광지역(지정연도)	2017년 소득액(2013)	2017년 관광객수(2013)
인제군 생태마을(2013)	301.1백만원(161.8백만원)	13.4천명(8.4천명)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2014)	181.8백만원(91.2백만원)	22.7천명(5.3천명)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2015)	256.3백만원(136.0백만원)	5.1천명(3.0천명)
제주 동백동산습지(2013)	825.0백만원(485.1백만원)	30.7천명(17.2천명)

□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새롭게 선정된 6개 지역 모두 생태관광에 대한 열의가 높고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이 확대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이용을 하는 지역발전 모델로 생태관광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신규선정 생태관광지역 개요.
2. 질의응답.

연번	지역명	지역 개요
1	 철원-DMZ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강원 철원군 · 위치 : 동송읍 양지리·이길리, 철원읍 대마리 등 · 면적 : 98km² · 특징 : 멸종위기종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로 DMZ 자연 환경 우수
2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전북 정읍시 · 위치 :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 면적 : 4.5km² · 특징 : 평지습지와 산지습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월영습지 보유, 내장산 국립공원 연계
3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경북 영양군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 면적 : 18.41km² · 특징 :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亞 최초), 반딧불이 서식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4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경남 김해시 ·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일원 · 면적 : 8km² · 특징 :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지정('17.11), 황새(봉순이), 독수리 서식지
5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경남 밀양시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 면적 : 5km² · 특징 : 재약산 사자평 습지보호지역, 진퍼리새, 복주머니난, 은줄팔랑나비 집단서식지
6	 제주-저지곶자왓과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위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 면적 : 15.09km² · 특징 : 저지곶자왓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 자원 보전지역

1.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생태관광(ecotourism)은 유흥위주의 기존 관광과는 달리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역사, 특색까지 고려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6개 생태관광지역을 선정하였고,
 - * 4개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국립공원 명품마을 신안 영산도)
 - 생태관광 지역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홍보, 컨설팅, 탐방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생태관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생태관광은 단순히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입니다.
 -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생태관광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 자연생태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자연이 주는 아늑함을 즐기는 한편,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정해진 탐방로 이용하기, 산나물 채취와 같은 훼손행위 하지 않기 등의 노력도 함께 한다면, 생태관광을 더욱 의미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임대료 지원으로 산재노동자 창업부담 완화

- 최고 1.5억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대 1.5억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63명에게 91,323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00명에게 1,5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이다.
 -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추진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장 창업지원

□ 지원대상

-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단이 지원하는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7.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3.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4.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5. 진폐장해자 및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한후 요양종결한 자
 6.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7.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요건(산재장해인 고용 등)을 충족하는 자
 8.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요건(산재장해인 고용 등)을 충족하는 자
- ※ 1~4, 6의 경우 관련 업종으로 창업 희망하는 경우에만 지원,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방식

- 채권확보 및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산재노동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연리 2%, 최장 6년)
 -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월세가 월250만원 이내인 경우
 -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 납부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접수처: 창업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재활보상(2)부

□ 지원절차



8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체감형 성평등 정책 추진에 속도 낸다.

-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시상식 및 19개 신규재지정 협약식』 개최 -

-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친도시)가 올해 전국 86개소로 크게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현장 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09) 2개 → ('10) 10개 → ('11) 30개 → ('12) 39개 → ('13) 50개 → ('14) 57개 → ('15) 66개 → ('16) 76개 → ('17) 86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월 24일(화) 오후 3시 포스트타워(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에서 새로 ‘여친도시’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19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기관 3곳*을 시상한다.
 - ※ 대구 달서구(대통령표창), 경기 수원시·대전 서구(국무총리표창)
-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양천구·영등포구, 강원 정선군, 충북 음성군 등 8개이며, 지난 2012년 지정됐던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 경북 포항시 등 11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평가 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구 분	지자체 명
신규지정 (8)	서울 양천구·영등포구, 강원 정선군, 충북 음성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남 광양시·장성군
재지정 (11)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충남 당진시,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①여성친화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여성과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②긴급자녀돌봄서비스와 주말열린보건소 등을 운영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③북한이탈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각계 각층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신규 지정도시의 주요 추진사업 >

		
서울 양천구 (육아 멀티플렉스)	전남 광양시 (본청, 배려주차장)	충남 금산군 (보건소, 건강누리관)

- 한편,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대구 달서구가 대통령 표창을, 경기 수원시와 대전 서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대구 달서구('10년 지정, '15년 재지정)는 '달서여성일자리단'을 구성하여 직업훈련, 취업연계, 동행면접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 성과가 인정됐다.
 - 경기 수원시('10년 지정, '15년 재지정)는 전국 최초로 「여성문화공간-휴(休) 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여성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문화공간 休 >

- 설 립 : 2014.5.1.(舊 상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하여 여성 건강문화 복합시설 건립)
- 주요시설 : 휴식공간, 건강문화공간, 일시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 맘카페 등
- 프로그램 :
 - 휴식 : 체력단련실, 건강도서관, 아로마 훈증실 등 휴식공간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 회복 지원
 - 심리상담 : 간이 심리평가를 통해 신속 및 심층상담으로 진행
 - 힐링 : 여성의 생애주기 및 계절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정적 심리정서 탐색 및 완화
 - 행복과 창의성 : 삶의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강화시키고, 창의적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전 서구(13년 지정)는 원투룸 밀집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친화 행복마을을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관내 7개 병원과 여성안심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달서여성일자리단)



경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센터 전경)



대전 서구
(도마동 여성친화거리제막식)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가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은 만큼, 앞으로 더욱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가족친화적·성평등적 문화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올해 국토부와 협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돌봄·일자리·안전 등 여성이 직면한 3대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모델(Test Bed)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2.5)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시행령 안 제3조제1항)

-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시행규칙, 안 제23조의3 신설)

-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 양식분야 기후변화 피해 저감 및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22일(월) 발표하였다.

최근 여름철마다 평년 대비 2~7℃ 가량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양식장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수온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17년 수온은 '12년 대비 28℃ 이상(고수온) 지속기간이 6~8일 증가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피해를 저감하고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②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③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R&D) 강화 ④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먼저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2020년까지 80개소까지 확대(現 54개소)*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응용프로그램(App)'을 도입**하는 등 이상수온 예보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하여,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1주일 전에 알려줌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7) 54개소 → ('20) 80개소(경북 포항, 경북 영덕, 전북 등 피해발생 집중해역)

** 수온관측시스템 앱 다운횟수(15~'17년 누적) : 12,500회(연평균 4,170회)

*** 수온 28℃ 도달 예측 시

적정 먹이공급량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고수온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양식재해보험의 보장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약제도를 개선*하여 어가의 피해보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보장대상 확대(27→29품종), 특약제도 개선(1어가 다품종 양식 시 취약품종만 가입 가능)

또한, 전북·넙치 등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온 등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밀도 사육(밀식)*을 한 경우 양식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표준 사육매뉴얼'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밀식에 따른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밀식 → 조류 소통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료·배설물 등이 자연정화가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등 어장환경이 악화 → 재해 발생 시 피해 가중

▲ 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만(灣)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폐쇄성 해역의 경우 체험학습, 낚시 등을 위한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 양식장 등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하여, 품목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해 발생에 더욱 취약하므로 시설 재배치·양식시설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어장청소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어장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R&D) 강화

아울러 수온내성을 지닌 양식품목 개발*, 바이오플락(Biofloc)** 및 순환 여과식 양식시스템***과 같이 급격한 기온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양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등을 중심으로 '양식재해 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수온에 강한 어종) 강도다리, 송어, 멍게, 해삼
(고수온에 강한 어종) 넙치, 방어, 꼬막

** 미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이 미생물을 다시 양식생물의 먹이로 이용해 양식장을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로 만드는 친환경 양식기술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양식 시스템

▲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양식장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식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자연 정화능력을 활용한 어장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 어장 개선 시범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굴 패각, 황토 등과 같은 어장개선 물질·장비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지자체 등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수온변화 현황 및 양식업 실태**

- (수온) 최근 여름철 수온은 평년대비 2~7℃ 높은 수준으로,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겨울철 저수온 현상도 발생

* '12년 대비 28℃ 이상 지속기간 6~8일 증가하고, 피해발생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

- (양식업) 양식면허, 양식품종 및 양식장 관리체계 등 현행 양식업 구조는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

- 해상가두리 등 양식장 대부분은 수온변화에 취약한 내만에 위치해 있으며, 우럭, 전복, 멍게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품종*이 많은 편

* 우럭(어류 양식생산량의 22.5%), 전복(패류의 3.4%), 멍게(기타 수산동물의 92.7%)

- 또한, 장기적인 어장이용, 밀식, 어장관리 미흡 등으로 고수온 발생에 더욱 취약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도 초기 단계

□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4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전략	세부 과제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강화	① 수온 예보체제 강화, ②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체계화 및 어업인 교육 강화, ③ 표준사육 매뉴얼 마련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양식지도 제작
재해 상습발생 어장 관리강화	① 폐쇄성 해역 구조개선(천수만), ② 종합적 어장개선(완도), ③ 가두리 양식장 등 효율적 관리 추진(통영)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① 수온 내성 품종 및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② 기후변화 대응 양식기술 개발 및 시설개선 지원, ③ 양식재해 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①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등 도입, ② 효율적 어장개선방안 마련, ③ 양식분야 재해대응 담당부서 기능 강화

①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강화

- (수온예보)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18, 주의보 발령 예측 1주일 전)하고, 실시간 수온 관측 시스템 확충('17, 54개 → '20, 80개) 등 추진
- (대응시스템 등) 적정 먹이공급량 등 양식장 관리요령 마련 및 어업인 교육, 액화산소 공급, 현장대응반 운영 및 양식재해보험 제도개선*('18)
 - * 보장대상 확대(27→29품종), 특약제도 개선(1어가 다품종 양식 시 취약품종만 가입 가능)
- (표준매뉴얼 등) 피해예상 품종(전복·넙치 등) 표준 사육매뉴얼 제작·배포, 표준사육기준의 단계적 제도화*, 해역별 양식지도 제작('18~'20)
 - * 어업인 교육→ '20년부터 피해발생 시 적정사육밀도까지만 보험·재해대책비 지원

② 재해 상습발생 어장관리 강화

- (천수만) 관광형 어장(체험학습, 낚시 등)이나 육상양식장 등으로의 시설 및 해역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으로 전환 유도('18~), 양식장 이설*
 - * 이설·재배치 가능해역 선정('18~'19) → 어민협의체 구성 및 이설·재배치('20~)
- (완도 등) 완도는 총 허용 양식량 설정, 조류소통을 위한 양식시설 표준화 및 어장청소 등 추진*, 통영은 액화산소공급 확대, 품종전환 유도('18)
 - * 종합적 어장개선 TF 구성 및 실천방안 수립('18)→5개년 단위 종합적 어장개선(~'22)

③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 (품종·기술개발) 고수온 내성 품종·종자 등(전복·바리류 등) 개발('18~'22), 바이오플라·순환여과양식 기술개발(~'21), 저층수 취수관 구축 지원(~'22)
- (예측) 연안 수온예측 고도화(~'22), 상습피해권역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20)

④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 (면허 심사·평가 등) 어장 관리실태,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해 재면허 결정, 면허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18~'19)을 통한 체계적 면허관리
- (어장개선 등) 효율적 어장 개선 시범모델 개발('18~'20), 어장개선물질·장비 발굴('16~'18) 및 수과원 기능강화, 인력확충